

민주노총의 정치활동과 조합원*

김 영 수 |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각종의 선거정치나 정책협의 등의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파적이고 이중적으로 분할된 정치활동의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의 정치활동과 지역·현장의 정치활동이 서로 분리된 채 전개되는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거나, 정치활동과 관련된 중앙 지도부들의 의사결정이 지역·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의회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주력하여 선거와 관련되는 권력자원을 조금이나마 강화시켰지만, 정치적 대중투쟁에 필요한 권력자원을 형성·강화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합원들도 자신의 이해나 계급적 이해를 정치적 대중투쟁으로 관찰시키려 하기보다 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관찰시키려 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정치적 투쟁공간이 의회라는 공간으로 협소해지고, 조합원 스스로 정치적 대중투쟁을 정치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의회, 정치적 대중투쟁, 계급의식

I. 문제의식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 정치운동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주도하여 노동자 계급의 정당을 결성하거나 정당에 대한 재정·인력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조합원들을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50-B0005).

각종의 선거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당에 투표하게 하는 운동을 전개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거나 정치적 투쟁공간을 확장하여 노동자 계급의 국가권력 수립 및 노동자 계급의 이해가 관철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과정이었다.

민주노총도 1996년 12월의 정치적인 총파업을 전개하고 난 이후부터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자원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정치활동의 핵심 주체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난 이후 정치활동을 강화하였고, 결국에는 2002년 4월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을 국회에 진출시키는 성과를 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2007년의 대통령 선거와 2008년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조합원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유리한 산별노조 건설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06년 11월 말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소속 76만 조합원 중에서 76%인 56만 명의 조합원이 산별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민주노총에 가맹한 연맹도 19개에서 15개로 축소된 상태이고, 2007년 말까지 90%가 넘는 노조들이 대산별 노조로 조직을 전환하면서 6~7개의 산별노조나 산별연맹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의 조직적 집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민주노총은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정치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결성, 민주노동당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선거정치의 강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 및 정치적 선전활동 등을 일상적으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이러한 정치활동을 전개한다고 해서, 혹은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을 국회에 진출시켰다고 해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 고양되거나 또는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이나 민주노총 산하의 다양한 산업·업종별 연맹들은 현재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치활동들이 조합원들의 정치적 투쟁공간을 확장시키고 있는가의 여부 및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및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역사적으로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산별노조를 건설한다고 해서 혹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정당을 중심으로 국회에 진출하였다고 해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 강화되거나 정치적 투쟁공간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시대를 맞이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재정립해야만 할 이유이기도 하다.

II. 정치적 주체로서의 노동조합과 정치활동

서구의 역사를 검토하면, 산별노조가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정당을 결성하여, 그러한 정당이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한 경우들이 존재한다. 레오 패니취(Leo Panitch)의 지적대로, “노동자 정당과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자율성을 토대로 노동자 계급운동의 발전 및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 구축에 필요한 상호연대활동을 전개하고, 그러한 연대활동의 과정에서 상호 수혜적인 연대의 기제들을 형성·유지·강화시켜야만 할 과제들인 것이다.”(Panitch 1981, 43) 노동조합은 불균등한 정치의식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대중조직이라는 특성상, 정치활동의 형식과 내용을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피선거권적 정치활동,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의 정책대안 활동,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활동,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활동, 조합원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조직하는 활동, 노동자정당의 결성을 통한 정치세력화 활동”(공덕수 1999, 8) 뿐만 아니라 파업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대중투쟁 등의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정당과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던 기존 연구들의 보편적인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Kelly 1988; 주성수 1992; 정영태 1993; 이강로 1999; Valenzuela 1992; 박동 200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정치활동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못한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투쟁을 노동자 정치운동의 주요한 형식이자 내용으로 간주하면서 노동자 계급의 ‘운동의 정치’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노동자 계급의 다양한 정치적 대중투쟁과 정치조직 내지는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운동을 분석한 경우도 있다(김세균 1990; 이광일 1999). 하지만 이러한 논문들도 조합원들을 노동자 정치운동의 주체로 형성하는 과정이나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일반적으로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신의 정당을 중심으로 노동자 계급정치를 실현하려는 정치적 토대를 강화”(Heffer 1983, 43)하면서, 정치활동

에 필요한 노동운동의 두 가지 요소를 구성하려 한다. 하나는 “자신의 전국적 조직을 중심으로 특정 정당 혹은 노동자 정치운동의 주체들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구축하고, 이러한 연대를 바탕으로 국가권력의 장악에 필요한 정치적 투쟁공간을 확보”(Korpi 1983, 40)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대중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의 불균등한 의식상태 및 노동조합운동의 주·객관적 조건의 불균등성을 계급적으로 통일시켜 내면서 조합원의 계급적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정치적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 즉 “노동조합 조직율과 노동자 계급조직의 전국적 조직화”(Korpi 1983), “상호연대에 기반하는 노동자 계급정치의 투쟁 공간 확장”(Valenzuela 1989), “계급투쟁의 조직적 전투성의 강화”(Therborn 1983), 투쟁국면에서 연대투쟁체로 형성되는 “계급적 동맹투쟁 및 노동자 계급의 연대투쟁 강화”(Collier 외 1991)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조합원이나 노동자들의 정치적 계급의식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부르주아 계급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정치적 투쟁공간을 확장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노동조합이 부르주아 계급정치에 대항하여 추구하고 획득해야만 할 정치적 과제들이자, 극복해야만 과제들이다. 왜냐하면 부르주아 계급은 노동자 계급을 대상으로 작동되는 부르주아 계급의 동의·포섭·억압 역량 등을 동시에 작동, 즉 “지속적인 이데올로기적 분할전략으로 계급정치 이데올로기의 쇠퇴, 노동자들의 탈정치화 가속화, 노동조합 간의 결속력 약화, 노조운동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 약화”(Hyman 1992, 162) 등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피선거권적 정치활동,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지위향상의 등의 목적을 위한 입법적 청원활동,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 정책적인 협의활동 등으로 제한된다면, 조합원들은 정치활동의 피동적이고 주변적인 위치로 전락하거나 부르주아 정치에 포섭될 수밖에 없다.

그러하여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계급적 정치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부르주아 계급의 대의정치에 대한 계급적 인식의 고양, 조직적으로 지원·지지하고 있는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는 활동이나 그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시키는 활동, 그러한 정당의 정당정책이 정당하다는 선전·교육 활동, 그러한 정당의 정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하게 하는 활동 등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정치활동을 개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으로 통일시키려 하는데, 이는 부르주아 계급의 개혁적 정당을 지원·지지하고 있거나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인 정치를 부정하려는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계급적 정치의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은 선거정치나 혁명적 정치와 같은 국가권력 획득과 직접 관련된 활동만이 아니라 제도와 국가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과 같이 국가권력 행사와 관련된 활동도 포함한다”(김금수 1999, 12).

III.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한 역사적 개괄

민주노총은 1995년 만들어질 당시부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강령에 표방하였다. 민주노총은 강령의 제2항에서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 제민주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며, 민족의 자주성과 건강한 민족문화를 확립하고 민주적 세권리를 쟁취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6)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1997년 대통령 선거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강화하였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을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으며, 아울러 정치권력의 장악에 필요한 정당을 조직화하는 과정이었다. “민주노총은 대중적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자가 적극 참여하고 각계 각층의 민주적이고 양심적인 세력과 함께 하는, 우리사회의 민주적 개혁을 실현하고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1997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998년 지자체 선거에서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 → 1998~1999년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의 건설 → 2000년 국회 원내 진출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화사업을 힘차게 전개해 나간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는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999년 5월에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를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에 창당하였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그 이후 2000년 지방선거부터 시작하여 2006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선거투쟁을 네 차례나 전개하였으며, 2007년 1월 현재 12월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2008년 4월로 예정인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정치위원회는 이러한 정치활동을 주도하였다.

민주노총은 산하 산업·업종별 연맹을 중심으로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투쟁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위원회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에서 요구하는 각종의 정치방침을 실질적으로 집행한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급투표 및 당원의 배가를 위한 조직화 활동,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활동,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선전 및 홍보활동, 민주노동당과의 정례협의회 활동, 각종의 노동단체 및 민중단체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연대활동, 정치활동의 물질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모금활동 등이 그것이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긴밀하게 협의한다. 선거투쟁과 관련된 선전물의 제작 및 배포, 선거 재원의 마련, 민주노총 내부에 정치실천단의 조직, 노동자 단체들과의 공동실천의 과제,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방안, 중앙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문제, 조합원의 명부를 파악하는 문제 등이 민주노동당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과의 유기적인 연대관계를 유지하는 한, 민주노총의 정치위원회는 이중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의 정강정책에 노동자 중심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활동을 전개한다. “2002년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 양대 선거와 노동자·민중투쟁의 결합을 통해 보수·수구와 진보의 대립 전선을 구축하고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통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쟁취, △ 양대 선거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결합과 지원, 계급 투표의 조직 등 선거에 관한 방침, △ 지역에서의 실천적 연대사업과 정당명부, 정치개혁,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 연대사업에 대한 방침, △ 조합원에 대한 교육, 선전 및 정치투쟁사업 방침 등이 제출되었지만, 가장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은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결정과 지지, 지원 속에 만들어진 민주노동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였다”(최승희 2002). 이러한 정치방침은 이후에 전개되었던 주요한 선거투쟁에서도 유지되었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투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정치활동은 제도화된 정당 및 선거제도라는 참여장치를 활용하면서 노동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자원을 강화하였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각종의 선거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정립,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토대 강화,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투쟁전선의 확대 및 강화, 지방의회 및 국회에 진출하여 현실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각종의 투쟁과 활동의 강화, 조합원들의 정치의식 고양, 진보진영의 정치적 단결의 강화,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정치적으로 관철”(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민주노총 비대위-민주노동당 2002) 등의 전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노동자 계급정치를 실현하는 활동의 주체로 나서고 있으며, 현재 산별노조를 완성하여 노동자 계급정치의 대중적 토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 모순을 지양하기 위한 저항주체로, 사회적 관계를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정치적 저항주체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대중투쟁, 의회에 진출하기 위한 선거투쟁,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투쟁, 그리고 정치적 계급주체를 형성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을 담당할 주체인 정치위원회 또는 정치담당자가 없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단위노조 자체에 상근역량의 담당자와 위원회가 설치되어 정치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산하 업종·연맹이나 단위노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단위노조는 조직의 규모에 관계없이 정치활동의 주체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노총의 중앙의 정치활동과 지역·현장의 정치활동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는 결국 다양한 정치활동(당원 배가, 당원 관리, 교육, 훈련, 선전선동 등)의 침체를 가져왔으며, 민주노동당을 지원·지지하지 않고 부르주아 계급의 개혁적인 정당을 지원·지지해 왔던 간부나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은 2004년의 4·15총선투쟁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강화, 노조간부들의 안정된 당 활동의 기반 구축, 노동자의 대상화를 극복, 정치기금 모금의 지양, 선거투쟁과 대중투쟁의 결합, 민주노동당의 노동자성 강화,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강화”(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332-33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004, 330-333) 등이다. 이러한 평가는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을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난 이후에 다양한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조합원의 계급적 정치의식은 쉽게 고양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 투쟁공간도 확

대·강화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V. 민주노총의 정치활동과 조합원

1.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활동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우리 조합원들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또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고 또 잘 모르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각급 회의, 토론, 교육의 장에서 왜 우리가 정치세력화되어야 하는지, 또 이번 지자체선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당원가입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토론하고 조직하자. 후보초청 간담회나 노보, 소식지를 통해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사업을 배치할 수 있다. 노동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통해 다른 보수정당 후보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누가 우리 노동자의 투쟁을 지지해 줄 것인지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2). 이는 노조운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합원들의 정치적 행태, 즉 정당 가입 여부, 정치적 참여활동의 여부, 계급투표의 여부 등을 근거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정치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게 하는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선전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면서,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도록 조직하였다.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여내고, 조합원들의 계급투표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득표를 확대하는 활동이었다. 민주노총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전개되었다. “선거운동은 단순히 돈과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정치의식강화, 조직화 사업과 결합되어서 진행되어야 한다. 각 조직은 정치담당자를 선정하고, 정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위원회의 훈련과 교육을 통해 2002년 선거활동이 일회적인 경험이 아니라 조직적인 성과로 남도록 해야 한다. 민주노총 후보,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하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2)는 것이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은 간부와 조합원 간의 괴리현상에 직면하였다. 조

직적인 정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은 쉽게 고양되지 않고 있다.

1) 당원 조직화

민주노동당은 “10만 당원 확대사업의 주된 주체와 대상을 바꾸자 - 10만 당원이 조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의 근간조직인 민주노총 및 전농 등의 단체에서의 당원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민주노동당 2004. 12)는 전략을 바탕으로 당원 조직사업을 전개하였다. 민주노동당의 당원은 2007년 1월 현재 약 80,000여 명으로, 2004년 3월에 비해 약 87%가 증가하였다. 민주노동당이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중적인 정당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당원을 배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성과이자, 진보적인 단체들이 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을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구축하기 위해 활동한 성과이다.

2001년 11월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당원은 6,700명 수준인데, 이는 전체 민주노동당 당원 18,000명의 36% 정도이다. 이후 민주노총은 조합원을 당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활동이 당원배가운동이었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에 가입하는 조합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04년 3월 30일 현재 민주노동당의 당원은 42,798명인데, 이 중에서 18,440명이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4. 3). 당원의 약 43%가 민주노총의 조합원이다. 그리고 2007년 1월 현재, 민주노동당의 당원은 약 80,000명이고, 이 중에서 약 38,000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2004년 3월 30일에 비해 약 19,500여 명의 조합원이 당원으로 가입하였고, 전체 당원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2007년 1월 현재 당권을 가진 민주노총 당원은 22,38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당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대비 3.44%에 불과하다. 약 16,000여 명의 조합원이 당비를 내지 않거나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당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모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대비 당원 조직율이 5%내외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당원비율이 일반 지지자 중의 당원 조직율과 비슷한 실정이다”(민주노동당 2004. 12).

민주노총의 당원 조직화 활동은 민주노동당을 결성하고 난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지만, 조합원의 당원 가입율은 아주 저조한 상태이다. 민주노총 중앙에서는 ‘당원 배가 운동’을 주요한 정치활동의 과제로 결정하지만, 지역이나 현장에서는 그

러한 운동을 실질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 부르주아 계급의 개혁적인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간부와 조합원이 존재하는 지역과 현장의 경우, 선거투쟁의 기간에도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2) 민주노동당 지지율

민주노동당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였다. 2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13%의 정당지지율을 획득한 결과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급등하였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2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회의원 32명을 당선시켰다. 민주노동당을 광의의 노동자 계급에게 지지를 받아 승리한 계급정당으로 규정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당원의 구성을 보면, 2004년 4월 25일 현재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을 합한 전체 임노동계급이 69.5%이다. 그리고 정당투표에서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사람들의 직업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농·임·어업 10.7%, 자영업 12.6%, 블루칼라 13.7%, 화이트칼라 23.0%, 가정주부 11.8%, 학생 14.3%, 무직 16.0%이다”(조돈문 2004. 5).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의 당원 중에서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 그리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비율은 총 70.7%이다(임영일 2004. 10).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비례의 경우 12.1%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둔 8%보다 4.1% 많은 득표를 하였으며, 당선자는 총 81명으로 2002년의 45명보다 36명이 늘었다. 물론 2002년에 비해 입후보자가 3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흡족한 결과라고 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정병기는 민주노동당의 2006년 지자체 선거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 지방선거, 2004년 총선에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일정한 지지기반을 확인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그 내용을 볼 때, 상대적이지만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보였다는 점, 2002년 지방선거에서 낮은 지지율을 받았던 지역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전략지역이라 할 수 있는 광주, 호남 지역에서 선전하였다는 점, 여성이 당선자 가운데 근 40%에 이른다는 점 등은 의미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정병기 2006).

이러한 현상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조합원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표 1은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여부를 조합원에게 설문조사

표 1. 민주노총의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지지 변화

연도	대상	민주노동당	지지정당 없다
1999	전체	25.7	57.4
	제조업	31.4	51.8
	비제조업	18.3	64.7
2001	전체	23.1	54.5
	제조업	33.7	43.8
	비제조업	15.5	55.1
2003	전체	49.0	51.0

자료: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1999년, 2001년, 2003년.

한 결과이다. 1999년에 비해 2003년의 지지율은 거의 2배에 가깝다. 지지율이 25.7%에서 49.0%로 상승하였다. 2004년 총선을 통한 국회진출은 바로 이러한 지지율의 상승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설문에 응답했던 조합원 중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대답한 조합원의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점이다. 1999년에 57.4%, 2001년에 54.5%, 그리고 2003년에 51.0%의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을 비롯하여 여타의 정당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노동당의 득표율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정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개혁적인 정당이나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지방선거부터 2006년 지방선거까지 네 번의 전국선거에 참여하였다. 아래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후보자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선거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3.11%이고, 정당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10.84%이다. 후보자에 대한 득표율은 지속적으로 약간씩 상승하고 있지만, 정당 지지율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노동자들이 선거에 참여해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해도, 그러한 노동자들의 계급적 정치의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투표행위만으로 계급적 정치의식을 규명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한 표는 보수적인 후보를 지지하고 난 이후에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나머지 한 표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수 있기

표 2. 민주노동당의 득표율 변화

	후보자 득표율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2002년 지방 선거	1.15%(기초단체장)	8.13%(광역의원)
2002년 대통령 선거	3.89%	
2004년 국회의원 선거	4.31%	13.03%
2006년 지방 선거		11.36%(광역의원)
평균	3.11%	10.84%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자들은 불균등한 정치의식을 보유하고 있다. 사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내재되어 있어, 그 동안 보수정당 간에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보수정당에 투표하곤 했다. 이번 4·15총선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낮은 지지율이 그것을 반증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이러한 경향성을 부추기기도 했다. 한 표는 당선 가능한 사람에게 찍더라도 정당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다른 한 표는 꼭 민주노동당에 찍어 달라고 했던 전략이 그것이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지지가 부족해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지만,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화를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게 한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노동조합 간부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대의원대회 등 주요한 단위의 정치방침에 대한 결의는 대단히 형식적이고 고민 없이 결정되었으며 결국 힘 있는 실천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실천적 정치활동의 결과인 당원 배가운동의 정체, 당과 민주노동당의 결합도 저하, 선거투쟁에 있어서의 형식적 부조 등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 2, 243).

3) 조합원의 정치적 참여활동과 실천

민주노총이 민주노동당의 선거정치를 수행하는데 지원하는 활동은 다양하다. 선거자금 지원, 선거운동본부에 봉사단으로 참여, 정치실천단의 조직, 후보를 선전하는 활동에 조직적으로 참여, 주변 사람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권유하는 활동 등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선거자금을 모금하여 민주노동당의 후

표 3.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연도별 예산액과 지출액

연도	예산액(원)	지출액(원)	예산 대비 지출 비율
1999	8,100,000	4,545,500	56.11%
2000	9,800,000	2,245,300	22.91%
2001	11,100,000	8,455,340	76.17%
2002	19,580,000	12,423,600	63.45%
2003	10,790,000	10,550,850	97.78%
2004	13,200,000	4,818,000	36.50%
2005	14,500,000	3,193,590	22.02%
평균	12,438,571	6,604,597	53.09%

자료: 민주노총, 각 연도별 정기대의원 대회 회의자료.

보나 민주노총의 후보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2004년 4·15총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조합원 1인당 3,000원의 정치기금과 10만 원의 정당기부금을 모집하였던 것이다. “공공연맹은 2004년 4·15총선에서 총 연맹에 납부하는 돈을 제외하고 1억 8천만 원의 예산 중 1억 2천만 원의 기금을 모금하였다”(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004. 5). 당시 공공연맹의 조합원이 약 10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모금된 금액은 목표액의 6.00%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노총에서도 나타난다.

2002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치기금모집의 결정내용과 실천내용을 보면,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치적 실천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2002년 대선에서 연맹별로 일정액을 중앙정치기금으로 납부(조합원 1인당 1,000원)하여 총 연맹의 선거지원 및 당 대선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모금 목표 총액은 약 60억 2천 만 원 정도(민주노총 조합원 수에 상응)였다. 그러나 모금된 총액은 약 2억 3천 만 원 정도(23,186명의 조합원)였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3, 243). 목표액 대비 모금액의 비율은 고작 3.82%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사업예산도 예산규모대로 집행된 경우가 거의 없다. 표 3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예산과 지출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예산액 대비 지출액의 비

율이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03년의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97.78%인데, 2005년에는 22.02%에 불과하다. 2001년에서 2003년까지의 지출 비율만이 60% 이상이다. 1999년에서 2005년까지, 민주노총 정치위원회의 평균예산은 12,438,571원이었지만, 지출된 평균 액수는 6,604,597원에 불과하다. 평균예산 대비 평균지출 비율이 53.09%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위원회 사업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될 것이고, 정치위원회 위원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역량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정치위원회가 민주노총에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화 사업의 핵심적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치세력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노조의 대중적인 정치사업을 위해 대부분의 선거에서 정치실천단의 조직, 정치기금의 모집, 1노조 1조합원 교육, 현장투쟁과의 결합, 유권자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민주노총 중앙은 정치활동과 관련된 각종의 선전 및 교육활동, 조직활동, 재정모금활동 등을 지역이나 노동현장의 간부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지역이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지역이나 현장의 노조간부들은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 즉 부르주아 계급의 개혁적인 정당에 대한 지원·지지를 조합원들에게 강요하거나 조합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긴다”(이○○, 2007). 그런데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정치활동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아래의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아래의 표 4는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치적 참여활동이 지극

표 4. 인천지역 민주노총 조합원의 정치참여 행태

	촛불 시위 참여 경험	특정 정당/후보 지지호소 경험	특정 정당/후보를 지원한 경험	정당 가입 여부
있다	13.9	64.4	29.3	34.4
없다	86.1	35.6	53.0	65.6
기타			15.7	

자료: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 「제17대 총선 관련 인천지역 노동자 정치의식 조사결과」, 2004. 8. 23.

참조: 민주노총 조합원 31,502명을 모집단으로 하고, 이 중에서 1,500명을 표본으로 선출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수거된 설문지수는 총 799매(53.2%)이다.

히 소극적이거나 능동적이지 못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투쟁의 일환인 촛불시위에 참여해본 조합원은 13.9%에 불과하고, 특정 정당/후보를 지원하였던 조합원은 29.3%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지원해야만 할 정당이 민주노동당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29.3%만이 민주노동당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조합원만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의 대의원, 중앙위원 등의 자격을 부여받아 파견되는 간부들도 역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당원들 중에서 부문할당비율(민주노동당 2005. 12;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2007. 3)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원 및 대의원들을 선출하여 파견한다.¹⁾ 그런데 대의원이나 중앙위원들은 민주노동당의 정기·임시 당대회에 참석하여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중심성을 강화하고, 노동자 중심성에 기반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2003년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의 총 대의원 790명 중에서 노동부문에 할당되어 파견된 대의원은 총 153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임시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48.36%인 74명에 불과하다. 임시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조차 민주노동당의 노동자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반면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간의 정례협의회는²⁾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과의 일상적인 결합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사업과제나 투쟁과제를 긴밀하게 협조하는 활동이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중앙 중심의 실무적인 차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례협의회가 곧 민주노동당의 정책활동에 노동자 중심

- 1) 2007년 1월 현재, 노동의 할당비율은 28%이고 농민의 할당비율은 14%이다. 노동의 할당분야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한국노총 소속 당원, 미조직 노동자 이다. 그런데 부문을 모두 채워도 전체 의결단위의 33%이며, 노동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확히 18.6%이다. 여기에 지역단위에서 선출된 중앙위원까지 합쳐도 전체 의결단위의 34%이다.
- 2) 민주노동당의 주요한 정책들이 민주노총과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화되거나 결정될 수 있다. 정례협의회는 분기별 1회를 기본으로 하고, 양 조직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비정기적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정례협의회는 16개 광역시도지부와 민주노총 지역본부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성을 유지·강화가게 하는 협의의 틀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이 상층 중심의 의회투쟁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발의하는 투쟁, 국정감사 등의 의회투쟁, 국가의 정책을 비판하는 투쟁 등의 토대였지, 조합원들의 정치적 참여활동이나 실천활동을 실질적으로 고양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참여활동의 실천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기도 한다. “노동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국회 의석도 장악했지만, 실제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표 찍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 내부에서 동원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노동당의 경선 과정이랄지, 이전과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적인 민주주의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이 상당히 훼손된 것이 사실입니다”(박병규 2004, 22).

2. 정치적 투쟁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정치활동

노동자들은 국가권력과 제도적 공간에서 투쟁을 하기도 하고 비제도적 공간에서 투쟁을 하기도 한다. 전자가 제도화된 참여장치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가권력의 내부에 투쟁공간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제도화된 참여장치의 수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국가권력과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것이다. 계급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정치적 투쟁공간은 다양하다는 의미이다. 의회를 장악하기 위한 투쟁은 국가권력 내부에 노동자들의 투쟁공간을 형성·확대하려는 것이고, 국가권력과 직접적으로 대결하는 투쟁은 정치적 대중투쟁으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두 가지의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였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의회공간 확보전략이 의회주의에 경도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했지만, 민주노총은 의회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주력하였다. 민주노총은 한편으로는 의회공간의 확보를 위해 민주노동당을 결성하여 정치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대중투쟁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1) 민주노총의 선거투쟁

민주노총은 의회공간을 장악하기 위해 후보들을 선발하여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나서게 하거나 민주노총의 후보로 나서게 하였다.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의 후보들을 당선시켜 중앙의회와 지방의회를 장악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활동들은 민주노동당을 결성하기 이전부터 전개되었다.

민주노총(준)은 1995년 지자체선거에서 광역의원 후보 7명, 기초의원 후보 20명을 노동자후보로 내세웠고, 2004년 4·15총선에서는 지역후보로 52명, 비례대표후보로 5명을 민주노총의 후보로 내세웠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4·15총선에서 299명의 국회의원 중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제도권 의회에 진출하였다. 2명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13%의 정당지지를 획득한 결과이다.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은 그 동안 보수적인 정치세력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각종의 정치적 의회활동을 자신들이 만들어 낸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선거정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각급 선거에 후보를 내세워 지자체나 국회에 진출하는 정치적 성과를 확보하였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하고 난 이후, “조합원들이 국회의원 10석밖에 없어서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의식 발전이죠. 민주노총 조합원의 일반적인 사회의식은 대한민국 국민의식과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다음번에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인식 수준의 심대한 확대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발전과정이에요”(이재영 2004, 29). 의회공간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은 의회공간에서 전개되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만으로 고양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의회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투쟁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또한 그것으로 토대로 정치적 주체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정치의식을 고양시킨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소위 선거공영제³⁾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선거투쟁을 전개하였다. 선거투쟁의 제

3) 민주주의 이행의 주요 판단지표 중에 하나가 ‘공정한 선거경쟁의 게임법칙’이다. 역사적으로 독재정권에서는 선거경쟁 자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아예 사회구

한, 선거참여의 제한, 소수대표제의 제한이라는 정치관계법의 테두리 내에서 선거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공공연맹 정치위원회는 2004년 4·15총선투쟁에서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성장이 큰 힘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단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려 했지만, 개정된 선거법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결국 지원도 못하였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004. 6). 개악된 정치관계법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금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지구당의 폐지, 지구당 후원회제도의 폐지, 합동연설회 및 정당연설회의 폐지, 후보 외 어깨띠의 착용 금지 등이 규정되었다”(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004. 6). 민주노총은 2004년 4·15총선투쟁에서 이러한 악법을 준수하면서 선거투쟁을 전개하였지만, 조합원을 실질적으로 선거투쟁에 결합시키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조합원은 선거에서 민주노동 후보나 민주노총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투쟁만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선거투쟁의 과정에서 당의 대중적 기반인 조합원(당원, 비당원 포함)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 즉,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당원이 아닌 민주노총 조합원 동력과 일반 당원의 책임있는 선거투쟁이 결합되지 못한 것은 후보결정은 당이 하고 집행은 조합원에 의지하는 기형적 관계가 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비밀집 지역이라도 겨우 확보된 조합원들도 지지 또는 활동과는 별개의 문제로 선거투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더구나 선거투쟁에 실제로 결합하는 동력은 결국 비조합원이지만 지구당의 핵심 당원에 불과하였다. 그 직접적 원인은 중앙 차원의 형식적 결의가 조합원에게까지 가면 전혀 실천되지 않았다. 결의의 실천이란 단계별로 투표참가, 민주노총 후보지지와 당원가입, 가족과 주변에 대한지지 선전, 선거자금의 지원, 선거투쟁에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것 등인데, 현 단계에서 조합원은 최소한의 낮은 단계인 후보지지 조차 자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태이다. 그것은 상층의 집행부 중심(정확히 표현하면 총연맹, 연맹과 지역본부)의 정치활동만 겨우 존재하였지 실재적 집행력을 담보하는 단위노조를 동력으로 하는 조합원 대중에 대한 직접적 정치활동은 실천되지를 았았다는 것이다”(양경규 2000).

성원들의 선거참여 자체를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르주아 지배세력은 형식적으로는 자유로운 선거경쟁의 법칙을 존치시키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한 선거경쟁의 법칙을 만들지 아니한다. 노동자·민중들은 단지 불공정한 게임에 동원되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면 그만이다. 소위 선거공영제가 그것이다.

2) 정치적 대중투쟁

노동자들의 정치적 투쟁공간은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회만이 아니다. 노동자들은 선거정치 이외의 다양한 정치적 대중투쟁, 즉 파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투쟁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활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 부르주아 계급은 사회적 존재기반에 대한 인식의 도구를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존재기반에서 형성되는 노동자 계급의 의지를 지배계급의 의지로 혹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일반의지로 전화시키기 위한 권력주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조의 정치활동이 '사업장'을 넘어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의회공간에서 투쟁함과 동시에 비제도적인 공간에서 정치적 대중투쟁을 전개하였다.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는 총파업을 중심으로 정치적 대중투쟁이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정치적 대중투쟁을 전개하기 이전에 민주노동당과 긴밀하게 협의한다. 민주노동당의 의회투쟁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차원이었다.

2006년의 비정규법안이나 선진노사관계로드맵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조직하는 활동을 전개하였고, 1996~1997년에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관계법을 무효화시키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다. 1998년 이후,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공공부문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총파업투쟁으로 저항하고 있다. 2002년 2월에 전개한 발전노조, 철도노조, 가스공사노조가 공동파업을 전개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문제는 총파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대중투쟁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06년의 비정규법안이나 선진노사관계로드맵에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의 비율이 10% 내외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6~1997년 총파업 투쟁을 제외한 그 동안의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투쟁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노총의 직접적인 정치투쟁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직접적인 대정부투쟁을 정치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당해 연도나 혹은 차기 연도에 전개될 전국적인 선거투쟁이나 보궐선거투쟁만을 위원회의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선거투쟁에 대응하는 정치활동에 주력하였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가 선거투쟁 이외의 정치적 대중투쟁을 정치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이러한 방식의 정치활동은 의회 공간 외부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권력자원을 형성·강화시키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정치적 대중투쟁이 민주노총과 정부의 합의로 혹은 정부의 억압으로 종결되는 상황인데, 이는 정치적 대중투쟁에 필요한 권력자원의 부재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합원들은 이러한 정치활동의 과정에서 대중적 정치투쟁의 한계만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대중적인 정치투쟁의 무력감과 패배주의적인 의식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억압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성격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에서 나타나는 이중적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의 중심으로 하는 의회주의적 구조와 부르주아 계급의 개혁적 정당과 연합하여 반한나라당 전선만을 추구하는 민족주의적 구조이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주의는 민주노총의 간부만이 아니라 조합원에게도 보편화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의회주의로, 의회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 쪽에 굉장히 무게 중심이 갈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가 의원들을 지도하는게 잘 안될 것 같아요.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이 누구인지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잖아요. 언론들도 몰라요. 사실은 당원들도 모릅니다. 국회에는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가 있어요. 그럼 당원들이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요구하게 될지는 자명하죠. 권력 구조에서 정치라는 것이 무슨 당론과 당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의회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이재영 2004, 25). 또한 민족주의적인 정파세력들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화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부정하는 정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한의 민주적·민족적 세력들을 상설적인 하나의 통일전선으로 조직하려 하면서, 민주노동당을 그러한 통일전선의 한 주체로 간주하려 한다. 민주노총의 민주주의 세력들은 이 과정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개혁적인 정당과 세력들에 대해 지원·지지하는 정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V. 맺음말

민주노총은 기업별 노조체계에서 발생되었던 정치활동의 다양한 한계, 즉 조합원들의 고립적이고 개별적인 정치활동을 대중적이고 계급적인 정치활동으로 변화시키는 주체이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의 후보들을 지방의회나 전국의회에 진출하게 하는 정치활동의 성과를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중조직으로서 정치적 투쟁공간을 확장시키지 못한 채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조차 강화시키지 못하였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치활동을 전개하는데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결론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산별노조 시대에 조응하는 민주노총의 정치활동 과제를 시론적으로 추출하는 과정이다.

첫째, 민주노총은 정치활동의 정파적이고 이중적인 분할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앙의 정치활동과 지역·현장의 정치활동이 서로 분리된 채 전개되는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활동과 관련된 중앙 지도부들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지역·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다'는 결정은 공식적이고 조직적이지만, 지역·현장에서는 부르주아 계급의 개혁적인 정당을 지원·지지하는 정치활동을 암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민주노동당을 지지·지원하기 위한 정치활동이 실질적인 교육활동, 선전활동, 선동활동, 조직활동 등으로 전화되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화는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둘째,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이 지방의회나 국회에 진출한 것은 분명히 민주노총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지자들의 계급투표라는 성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이 '한 표는 당선이가 가능한 후보에게 투표하더라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투표에서는 반드시 민주노동당을 찍어 달라'는 내용의 교육과 선전을 하였듯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의 상승이 곧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계급적 정치의식의 고양과 무관할 수 있다. 조합원이나 지지자들이 후보자 투표에서는 부르주아 정당의 개혁적인 후보자를 지지하고, 정당투표에서만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이중적인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과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동일되었을 경우, 민주노동당에 대한 노동자들의 계급투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합원이나 간부들 역시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활동주체, 즉 대의원이나 중앙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이며, 또한 당원으로 가입하는 조합원의 비율도 지극히 낮은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민주노동당을 주도적으로 만든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스스로 민주노동당을 정치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이 '의회주의'에 경도되어 노동자 계급의 정치를 스스로 고립화시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총은 의회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주력하여 선거투쟁과 관련되는 권력자원을 조금이나마 강화시켰지만, 정치적 대중투쟁에 필요한 권력자원을 형성·강화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조합원들도 자신의 이해나 계급적 이해를 정치적 대중투쟁으로 관철시키려 하기보다 의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정치적 투쟁공간이 의회라는 공간으로 협소해지고, 조합원 스스로 정치적 대중투쟁을 정치활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추상적인 선언이나 담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계급적 정치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러한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투쟁공간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의 이해만을 추구하는 대중조직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추구하는 계급적 대중조직으로서의 정치적 역할과 과제들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공덕수. 1999. "한국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 연구 — 시기별 실태와 유형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논문.
- 김금수. 1992. "한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략목표."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단과 모색』.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영수. 2004. 『국가·노동조합·노동자정치』. 서울: 현장에서미래를.

- 민주노동당. 2004. 12. 당원확대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내부용).
 _____. 2005. 12. 비상대책위 제10차 회의 자료.
- 박 동. 2004. "한국 노동체제의 변화와 사회협약의 정치에 관한 연구: 1987~1998."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병규. 2004. "민주노동당 의회진출과 좌파정치의 방향." 『진보평론』 21호. 서울: 현
 장에서미래를
- 신광영. 1994.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서울: 나남.
- 양경규. 2000. 『민주노총 정치학교 자료집』. 민주노총.
- 이○○.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 인터뷰. 2007년 3월 20일. 서울에
 서.
- 이재영. 2004. "민주노동당 의회진출과 좌파정치의 방향." 『진보평론』 21호. 서울: 현
 장에서미래를.
- 임영일. 2004. "민주노동당과 노동정치." 『연대와 실천』 124호. 부산: 영남노동운동연
 구소.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2007. 3. 정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자료. 서울: 공공
 연맹.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2004. 5. 4·15총선 평가 초안. 서울: 공공연
 맹.
- _____. 2005. 『2004년 공공연맹 사업보고서』. 서울: 공공연맹.
- 전국금속산업연맹. 2001. 2001년 산별노조 조합원 교육지. 서울: 금속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6. 『1995년 사업보고서』. 서울: 민주노총.
- _____. 1997. 『민주노총 2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서울: 민주노총.
- _____. 2004. 『민주노총 사업보고』. 서울: 민주노총.
- _____. 2004. 3. 4·15총선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교안. 서울: 민주노총.
- _____. 2004. 5. 민주노총, 민주노총 비대위-민주노동당 대표 간담회. 서울: 민주노총.
- _____. 2004. 2. 정치교안. 서울: 민주노총.
- _____. 2000. 3. 『민주노총 산별노조 건설 전략』. 서울: 민주노총.
- _____. 2003. 『2002년 사업보고서』. 서울: 민주노총.
- 정병기. 2006. "2006년 5·31지방선거: 정당별 투표경향과 계급/계층별 투표경향."
 『현장에서 미래를』 120호(8월). 서울: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 조돈문. 2004.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을 중심으로." 한국산
 업사회학회 춘계 학술대회. 서울: 한국산업사회학회.
- 최승희. 2002.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진보진영 대단결을." 『노동사회』 63호(3월). 한국

노동이론정책연구소.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Collier, Ruth Berins, and David Collier. 1992. *Shaping the Political Aren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Heffer, Eric. 1983. "Socialist and the Labour Party." *New Left Review* 24(140).

Heron, Brain. 1996. "The Birth of Socialist Labour." *Capital and Class* 59.

Hyman, R. 1992. "Trade Unions and Disaggregation of the Working Class." Marino Regini, ed1 *The Future of Labour Movement*. SAGE Publications.

Korpi, Walter. 198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Boston, Melbourne and Henley: Billing and Sons Ltd.

Moran, Jonathan. 1998. "The Dynamics of Class Political and National Economics in Globalisation: The Marginalisation of the Unacceptable." *Capital and Class* 66.

Panitch, Leo. 1981. "Trade Unions and the Capitalist State." *New Left Review* 21(125).

Rogers, Joel. 1995. "How Divided Progressive Might Unite." *New Left Review* 36(210).

Therborn, Göran. 1983. "Why Some Classes Are More Successful than Others." *New Left Review* 24(138).

Valenzuela, J. Samuel. 1989. "Labor Movement in Transition to Democracy: A Framework for Analysis." *Comparative Politics* 21(4).

ABSTRACT

The Political Activity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and Labour

Young Su Kim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Confederation of Trade Union(KCTU) starte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ies to form the power resources of labor class after the general strike in December, 1996. After forming the Democratic Labor Party initiatively, the KCTU succeeded in going into a local assembly through local election, 2000, and led the candidates of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to advance in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general election of April, 2004. But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KCTU have been partial and have been done in dual structure. That is, the political activities between the central executive committee and regional workplace tend to be separated. For example,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has not substantially performed policy decisions of the central executive committee in regional workplaces. Even though the KCTU could strengthen the power resource concerning election by struggling for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Assembly, it could not form the power resource needed for mass struggle. As a result, the members tend to accomplish their demands by depending on the Korean Democratic Labor Party rather than by depending on mass struggle. This causes the political struggle of the members to be limited to Assembly, and the members not to regard mass struggle as political activity.

Keywords: KCTU, DLP, National Assembly, political mass struggle, class consciousness